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 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광주지방검찰청
공보담당관 인권보호관 노진영
전화 062-231-4332/팩스 062-231-4951

보 도 자 료
2022. 12. 2.(금)

제 목	광주·전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수사 결과

- 광주지방검찰청(검사장 이수권)과 산하 4개 지청은, 금년 6. 1. 실시된 **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** 총 **661명을 수사**하여, 그 중 **290명(3명 구속)을 기소**하였음
  - 당선자는 총 **75명을 수사**하여 그 중 **16명을 불구속 기소**하였음
  - 유형별로는 **금품선거사범이 267명(40.3%)**으로 **가장 많이 발생**함
  - **고소·고발 비율은 73.0%**로 제7회 대비 **다소 증가**하였음
- 광주지방검찰청은 **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**을 기할 예정

1 광주지검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 [지청 포함]

1. 입건 및 처리 현황

구 분	입건(구속)	기소
제8회	**661명(3명)**	**290명(3명)**
제7회	738명(11명)	345명(11명)

○ 광주·전남지역 제8회 지방선거사범은 **총 661명**으로 **제7회 지방선거사범(738명)에 비해 11.6% 감소**하였음

2. **당선자 입건 및 기소 현황**

○ **당선자**는 총 75명을 수사하여 **그 중 16명(기초단체장 6명, 광역의회의원 1명, 기초의회의원 9명)을 불구속 기소**하였음

3. **유형별 입건 현황**

구 분	전체	금품선거	흑색선전	불법선전	폭력선거	기타
제8회	**661명**	**267명 (40.4%)**	**163명 (24.7%)**	**13명 (1.9%)**	**21명 (3.1%)**	**197명 (29.9%)**
제7회	738명	157명 (21.3%)	222명 (30.0%)	0명 (0.0%)	43명 (5.8%)	316명 (42.9%)

○ 유형별로는 **금품선거사범의 비율이 40.4%로 가장 높고**, 흑색선거사범의 비율은 **24.7%**로 제7회 지방선거(30.0%)에 비해 감소하였음

4. **단서별 입건 현황**

구 분	입 건	인 지	고소·고발
제8회	**661명**	**178명(27.0%)**	**483명(73.0%)**
제7회	738명	233명(31.6%)	505명(68.4%)

○ 고소 · 고발 비율은 **73.0%**로 **제7회 지방선거사범(68.4%)에 비해 다소 증가**하였는데, 무소속 후보자 강세 및 경선과정부터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의혹제기에 수반된 것으로 분석됨

2 향후 계획

○ **금품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**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

○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**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**

○ 한편 2023. 3. 8.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, **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·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**

※ **'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주요 수사 사례' 별첨**

[별첨]
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주요 수사 사례

1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사례

○ 비서실장과 공모하여 선거캠프 자원봉사자, 읍면장 등을 동원,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합계 3,350만 원 상당 과일을 제공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,200만 원 상당 과일을 제공한 前 ○○군수 A 구속 기소, 범행에 가담한 A의 처 B, 비서실장 C 등 가담자 20명 전원 불구속 기소 (장흥지청)

○ 선거일 이후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사무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등 66명에게 합계 5,174,72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군수 당선자 등 22명 불구속 기소

※ △△군수 당선자 D, 선거사무장 등 제공자 5명, 선거운동원 등 제공받은 자 17명 등 총 22명 불구속 기소 (광주지검)

○ 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선거구민 1명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□□군수 당선자 E 불구속 기소 (광주지검)

○ 주민 15명에게 군수 후보(당선인)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135만 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를 제공한 군수 후보의 지지자 F를 기부행위 금지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(순천지청)

※ F에 대해 검찰 직구속 영장 청구했으나, 법원기각(도주·증거인멸 우려 없음)

○ 미신고 지역선거책임자 G는 선거사무원 H 등 6명에게 현금 845만 원을 제공하고, 당원 9명에게 합계 2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군수 후보(당선인)를 위하여 당원들을 매수하도록 하고, 선거사무원 H는 G의 지시에 따라 당원 5명에게 현금 15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책임자 G 등 11명을 매수및이해유도 등으로 불구속기소 (순천지청)

※ G에 대해 사경 신청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기각(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)

2 허위사실공표 사례

○ 후보자토론회 등에서 상대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3건의 허위사실(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사주받았다는 사실 등)을 공표한 ◇◇시장 당선자 I 불구속 기소(목포지청)

3 당선무효유도 등 사례

○ 상대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상대후보의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상자(시가 90만 원 상당)를 제공받은 후 곧바로 선관위에 제보한 J 및 공모한 ◇◇시장 당선자의 배우자 등 3명 불구속 기소(목포지청)

4 여론조작 및 불법 여론조사 사례

○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6,167명에게 일반군민인 것처럼 이중투표를 권유하여 여론을 조작한 ☆☆군수 당선자와 그 배우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(목포지청)

○ ◎◎군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'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면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다'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일반 선거구민 2명 불구속 기소(해남지청)

5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사례

○ 선거운동원 8명에게 1인당 220만 원 상당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한 군수 당선인 외 8명 각 불구속 기소(광주지검)

○ 군의원 당선인 K, 선거사무원 L은 선거구 주민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, 선거사무원 M은 선거사무원 L에게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, 위 주민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여, 군의원 당선인 K, 선거사무원 L, M을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(순천지청)

※ 선거사무원 M이 선거사무원 L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는 검찰 인지

6 정치자금 부정수수 사례

○ 전기공사업자로부터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 명목으로 4,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부정 수수하고, 직원 18명을 고용하여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교육감후보(낙선) N, 전기공사업자 O 및 유사선거사무실 직원 등 20명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(순천지청)